

[기자회견문]

권력감시 막으려는 부산시장 규탄한다. '언론소송' 즉각 철회하라!

부산시가 부산MBC 시사프로그램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이하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편'에 반론 보도 청구 소송(언론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역할을 소송으로 무력화하려는 언론탄압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일이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시민의 권리를 무시한 부산시의 비민주적 태도가 너무나 개탄스럽다.

부산MBC와 대구MBC 공동 제작 시사프로그램 <빅벙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과 대구시장의 주요 공약과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방송을 4월 22일과 5월 6일 두 차례 보도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 대표 공약인 '15분 도시'에 대해 점검했다.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15분 도시 부산'의 기본 계획이 완성되기도 전에 홍보성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점 △공약 계획에 없었던 1,240억 원 규모의 정책 공모 사업을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66억 원의 예산을 무리하게 확보한 점 △핵심 요소인 생태성보다 토건 위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에 대한 검증이었기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송이었다. 지방선거에 꼭 필요한 공약 검증 보도로 시민사회는 오히려 반겼다.

그런데 부산시는 공약 점검 편이 방송된 직후인 5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사실관계뿐 아니라 출연자 의견 발언까지 포함하여 13개 항목에 대해 A4 3장 분량의 정정보도문 전체를 읽을 것을 요구했다. 방송에 직접 출연해 '15분 도시' 공약에 대해 논의하자고 부산MBC가 제안한 부산시 반론권 보장제안 또한 거절했다.

언론중재위가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자 부산시는 6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소장에서 "정책을 본격화해 나가야 할 시기에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의 확대·재생산 및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

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오류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가 목적이 아니라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검증과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시민의 알 권리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부산시민은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될 부산시장의 핵심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는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정책인지 알 권리가 있다. 알아야 한다. 하기에 언론은 시민을 대신해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부산시가 공약 검증 방송에 대해 소송 청구로 대응하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부정하고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비민주적인 행위이다. 결과를 떠나 ‘언론 소송’만으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일체 차단하고 부산시의 주장을 일방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요구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다. 부산시의 ‘비판 봉쇄’ 소송으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빅벙커>에 대한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일방적인 홍보수단으로 삼으려는 언론 대응으로는 ‘15분 도시’는 물론이고 그 어떤 사업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전국의 언론노동자는 부산시가 소송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언론 대응을 포기할 때까지 적극 감시하고, 언론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8월 29일

언론공공성지킴이부산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